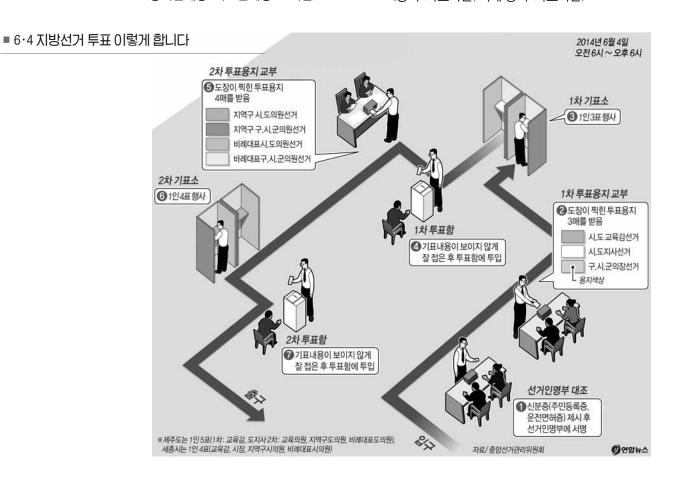
1차 투표 3장, 2차 4장…교육감은 기호 없어 이름 선택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유간〉

광역·기초의워. 비례 광역·기초의워



6·4 지방선거가 4일 오전 6시부터 광주·전남 1221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이말은 한 명의 유권자가 투표해야 하는 선거의 종류가 7개이며, 투표소에 가면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때문에 미리 투표 요령 등을 숙지해야할필요가 있다.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이날 투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가능…신분증 꼭 지참

는 유권자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등을 통해확인할 수 있다. 또 투표하러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도장을 챙겨갈 필요는 없다.

투표장에서는 ▲교육감선거 ▲시·도 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시도의 원 선거(지역구·비례) ▲구·시군의원(지 역구·비례) 등 유권자 1명이 7표를 행사 하게 된다.

투표소에서는 먼저 '본인 확인하는 곳'

투표 용지 1차 기표 (용지 3정) 시 · 도교육감 (영) 지 · 도교육감 (영)



정당 기호순 배열



2차 기표 (4장)

1 강 당 김이박
2 을 당 안정의
3 병 당 홍김정
4 정 당 조윤강
5 무소속 의한앙

지역구구・시・군

비에대표시·도의 변수기 1 강 당 2 을 당 3 병 당 4 경 당 5 무 당 광역(시도) 비례의원 비례대표구·시·군역 1 강 당 2 을 당 3 병 당 4 정 당 5 무 당 기초(시군구) 비례의원

기초(구·시·군) 의원 광역(시도) 비례의원 기초(시군 한정당 두명 이상 후보를 내면 정당에 투표 정당에 투표 '가, '나' 등을 붙임 1명만 기표

한장에 한번만 기표…인증샷, 특정후보 게시 안돼

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해야 한다. 이어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서로 색이 다른 용지 3장을 받는다. 이 용지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 장, 교육감을 투표하게 된다. 기표소에 들 어가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 만기표한 뒤 '1차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어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 가면 다

시 서로 색이 다른 용지 4장을 준다. 지역 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에 대해 각 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 가 끝난다.

투표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주의할 점 도 많다. 투표를 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 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 이나 손도장으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유권자가 촬영하는 '투표 인증샷'의 경 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 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없으 면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 보자의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 의 선거벽보나 현수막 앞에서 찍어서 트 위터 등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어 금지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기초단체장 막판까지 '혼탁'

순천·광양·영암 등 후보간 고발·수사 촉구 잇따라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가 가열되면 서 막판까지 고소·고발과 비방전이 난무

무소속 조충훈 순천시장 후보는 3일 새 정치민주연합 허석 후보 등 4명을 공직선 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선거를 하루 남겨놓고 비방 문자를 사회관계망(SNS)에 무차별 살포 하고 있는 허석 후보 측은 시민을 우롱하 는 억지 코미디를 즉각 멈추라"며 "선거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방 폭로 행위는 선거 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부분 종 결됐지만, 이번만큼은 비방과 혼탁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허석 후보 측 선거대책 본부는 순천시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열 어 A씨가 조충훈 후보를 향정신법 위반 으로 고발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무 광양시장 후보 측도 이날 "무소속 정현복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으 로 넘겼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정 후보는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도 않고 땅 투기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애초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언론보도를 통해 김 후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허위사실을 배포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현복 후보 측은 긴급성명을 내고 "김 후보 측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질문한 번을 후보자의 혼탁선거로 몰았다"며 "김 후보와 관련한 자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거 판세가 기울자 검찰 고소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판세를 뒤집으려는 알팍한 속셈을 쓰고 있다"고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 날 논평을 내고 "지난 2일 영암군 사회단 체 모 간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 후보가 자신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살포했다고 밝혔다"며 선관위와 전남경찰청의 철저 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해당 간부에 따르면 모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는 측근으로부 터 지난 5월29일 50만원의 현금을 받았으 며 현금을 받은 직후 선관위 직원들에게 수색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 지난 5월27일 영암군 내 모 사회단 체 회장에게 50만원의 불법적인 금품을 살포해 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음에도 불구,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ィ 고 구성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불법 판치는 전남

완도, 거소투표 위반·무안, 식사 제공 등 잇단 적발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거소투표 위반,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행위가 잇따 라 적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기부행 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모두 11명 을 검찰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완도지역에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뒤 대리 수령하고 대리투표한 이 장 A씨 등 7명을 적발, 해남지청에 고발했 다. 거소투표는 마을 이·반장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을 파악해 본인 도장을 받아 읍·면 사무소를 거쳐 선관위에 신청한다.

또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31일 선거구민 76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완도

지역 이장 B씨도 적발했다.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무안지역에서도 특정 도의원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 20여명에게 63만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장협의회장 C씨 등 2명이 목포지청에 고발됐다.

목포지역에서는 전과기록을 삭제하고 허위로 선거공보물을 제출한 시의원 후보 자 D씨가 적발돼 고발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本社人事

陰昌榮 (전북취재본부 고창주재) 직권면직 〈5월31일자〉





대표전화 **1599 - 4474**